

르포/탄력받은 영암 F1 경주장 건설현장 가보니

# 내년 10월엔 불도저 대신 F1머신 굉음

## 정부 건설비 지원·특별법 가시화 '활기' 공정률 43%...19일부터 건축공사 착수

"내년 10월이면 이곳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F1 머신들이 굉음을 내며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9일 오전 밝기운이 완연한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와 난전리 간척지 일원에서는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공사가 한창이었다.

오는 2010년 포틀러 원(F1)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중이었다. 지반을 다지기 위한 흙을 가득 실은 25t 덤프트럭이 줄을 이으며 공사현장을 오갔다.

이곳 공사현장에 들어갈 흙은 총 560만㎥에 이른다. 경주장을 인접하고 있는 영암호 수위보다 지표면을 높여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흙으로 성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내년 10월이면 F1머신(자동차경주차량)이 질주할 서킷(F1 트랙 5천684km)이 들어설 곳은 불도저가 굉음을 울리며 지반을 다지고 있었다. 서킷을 포함해 경주장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의 전체 규모는 4.3km, 여의도 면적의 1.3배 정도다.

지난 2007년 11월 첫 삽을 뜬 F1 경주장은 현재 토목 공정 43%를 마친 상태다.

경주장 도로와 건축물이 들어설 곳은 이미 계획 공정을 모두 마무리 했으며, 경주장 트랙과 마라나, 수로 등의 토목공사는 87%가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경주장 부지가 애초 간척지였기 때문에 땅 속 불베기 작업과 초 연약지반 처리 공사가 아직도 진행중이었다. 1년 6개월 뒤 굴착기와 불도저의 굉음 대신 F1머신의 굉음

으로 가득할 이곳 경기장의 서킷은 5천684km로, 이탈리아 '몬사르티'에 이어 세계 2번째 규모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장거리다.

이 중 코너 없이 직선이 계속되는 1.25km 구간은 세계에서 제일 긴 직선 구간으로, F1 머신이 최고 시속 33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광속 서킷의 이미지를 구현해 관람객의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와 난전리 간척지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F1대회 경주장 건설이 한창이다. 현재 43%의 토목 공정률을 보이는 등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중이다.

서킷은 경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안전이 우선이다. 따라서 서킷에 쓰이는 아스팔트 입자는 일반 아스팔트보다 훨씬 작고 미세하다고 한다.

총 공사비 3천400억원이 투입되는 경주장엔 F1 서킷과 함께 국내외 각종 자동차 경주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상설 트랙(3천47km)·컨트롤 타워·미디어센터·부대시설 등이 총 26개 동의 건축이 다양하게 들어선다.

경주장 건설단은 오는 19일에는 관람석인 그랜드 스탠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람석은 총 12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

경주장 주 출입문은 전통 기와지붕 형태로,

관람석은 기와집 처마선을 지붕선에 도입하는 등 한국의 전통미와 남도의 예취미를 반영한다.

이 공사는 내년 7월 마무리돼 FIA(국제자동차연맹)의 검수를 거친 뒤 역사적인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가 열리게 된다.

윤진보 F1대회 준비기획단장은 "삼포지구 개발계획 승인신청과 정부의 경주장 건설 비용의 국고지원, F1 지원법 국회 통과를 앞두는 등 대회 순항을 예고하는 조짐이 잇따르는 등 F1대회 개최가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성공개최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경주장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상 최대 추경 어디에 쓰이나

## 일자리 창출·내수 확대 역점 4대강·SOC 확충 집중 배정

한나라당이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면 서 그 쓰임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일자리 창출 ▲내수 확대 ▲구조조정 지원 등에 추경을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경제위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며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세계적으로 대외교역이 위축되고 선진국의 경제위축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시장규모가 축소되므로 미리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환자가 속출할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추경편성을 제기했다.

3가지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하되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나성린 제3정책조정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9일 "일자리 창출은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서민 문제와 내수 활성화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다목적 카드"라며 "이번 추경의 상당액이 이 부분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추경 규모는 20~30조원 또는 그 이상. 만약 여러

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분(10조원)을 포함해 추경 규모를 30조원으로 잡을 경우 순수한 정부 추가 지출은 20조원이 된다. 이 20조원의 가장 많은 부분이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최근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이면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만료돼 대량 해고 사태가 예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은 올해 4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구직자 가운데 취업 가능인원은 26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일자리 만들기와 유지, 나누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청년인턴제 확대, 직업훈련 및 고용유지 지원, 신규고용촉진 장려, 실업급여 등에 추경을 대폭 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과 창업 점포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영유아 보육지원,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감면 Q&A

## "분양권 매매는 대상서 제외...주택 취득일이 기준"

기획재정부는 9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간 한시적 감면 조치와 관련해 최초 매매계약이 아니라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분양권 상태가 파는 경우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양도세 감면 조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기준일인 올해 2월11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미분양 주택이 아니다. 대책 발표일 현재 미분양 주택이 아니므로 미분양 주택 수요를 촉진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

는다.

-제3자가 2월1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6월30일 계약을 해지해 다시 건설업체 보유로 된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받는다.

▲이 역시 기준일 현재 미분양 주택이 아니므로 감면받지 못한다.

-올해 2월12일 이후~내년 2월11일 기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내년 2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취득한 미분양 주택은 준공되기 전에 분양권 상태

로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언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말하는가, 매매계약일부터인지, 주택취득일인지 궁금하다.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므로 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이다.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아파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시점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 경우 몇%를 감면받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계약 때 과밀억제권역 내였다가 조치 시행 이후에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조정된 경우는 계약 당시 기준을 적용해 60%만 감면한다. /연필뉴스

### 광주시는 경제·서민 살리기에 역점

광주시가 경제살리기와 서민복지를 위해 올 하반기에 400여억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회 추경예산안 2천350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투자 확대, 소외계층 복지지원 확대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해 재원을 편성한 것이다. '경제살리기와 서민경제 안정' 부문에서 청년실업 해소 등 일자리 만들기에 171억원,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52억원,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건립·운영 49억원, 서민생활 안정 48억원, 장애인복지 38억원 등 총 394억원이 반영됐다.

또 '문화수도 육성 및 체육진흥' 분야에서 빛고을 시민문화관 건립에 34억원, IT사이언스 스퀘어 건립 50억원 등이며, 광주공원 주변 생태숲 복원 70억원, 위생매립장 조성 50억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추경안 편성에 따라 광주시의 예산은 2조9천485억원으로 당초 예산 2조7천135억원보다 8.7% 증가한다. /윤필기자 penfoot@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요즘...

# 사무실 통신비 부담되지요?

▶ 무조건 50%이상 절감시켜 드립니다.  
▶ 단말기(Gateway)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1566-9927